

정책브리핑



정책브리핑 | 2022-39호 | 2022년 11월 10일 | 발행처 민주연구원 | 발행인 노웅래 | idp.theminjoo.kr

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전기차 보조금 규정에 대한 대응방안

정상희 · 최환석 연구위원

《 요약 》

■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(Inflation Reduction Act: IRA) 시행

○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최종 발효('22.8)

- 에너지 안보 및 기후위기 대응 등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, \$7,900억 규모 예산계획 포함
- 특히, 역내 의무생산 및 주요 광물·부품 조달 조건 만족 시 전기차 보조금 \$7,500 제공

■ 국내 자동차 업계에 미치는 영향

○ 한국산 전기차는 전량 국내에서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어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미포함됨에 따라 현지 시장경쟁력 약화 불가피

- 미국 현지 생산비중 확대로 우량 협력업체들의 동반진출이 가속화될 경우 국내 제조업 공동화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

■ 대응 방안

- IRA 시행령 마련 시 FTA 체결국에 대한 법 적용 예외 또는 유예를 강력히 요청
- (가칭) 미래차 특별법 제정, 신속하고 체계적인 미래차 생태계로의 전환 지원
- 내수시장 확대를 위한 전기차 보조금 제도 개선
- 중소·중견기업을 중심으로 한 초소형 전기차 생태계 조성 지원

♣ 이 글의 내용은 연구자의 의견이며, 민주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.

1.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(Inflation Reduction Act: IRA) 시행

○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(The 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) 최종 발효('22.08)

- IRA는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인 'Build Back Better' 추진을 위한 세 번째 법안
 - ① 코로나 구호 법안(American Rescue Plan, \$1.9조, '21.3월 제정), ② 물적 인프라 법안(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, \$5,500억, '21.11월 제정)
- 에너지 안보 및 기후위기 대응 등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, \$7,900억 규모의 예산계획을 포함
- 미국 중간선거에 따른 공화당의 하원 탈환으로 핵심 쟁점들에 대한 속도조절론이 제기되고 있으나, 법안 자체가 폐기될 가능성은 사실상 전무

○ (재정지출) 에너지 전환 및 기후변화 대응, 헬스케어 지원 확대 등

- 에너지·기후변화: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% 감축을 목표로 친환경에너지 지원, 소비자 에너지비용 보조 등에 \$3,860억 투자
- 헬스케어: '22년 말 일몰 예정이었던 건강보험개혁법(Affordable Care Act) 보험료 보조금 수혜대상 및 지원규모 3년 연장 등 저소득층 의료지원에 \$980억 투자

○ (재원확보) 대기업 최저한세율 적용, 자사주 매입 과세, 처방약 가격개혁 등

- 최저한세율 적용: 약 150~200개 기업 대상 \$3,100억 규모의 세수 확보 추정
- 자사주 매입 과세: 내년 1월부터 기업의 자사주 매입 시 매입금액의 1%를 소비세로 부과
- 처방약 가격개혁: 공공의료보험 적용 의약품 가격에 대한 물가연동제 도입, 처방약품 가격 협상 허용 등을 통해 \$3,200억 규모의 추가재원 확보

[인플레이션 감축법안 주요 내용]

구분	테마	내용
재정 지출	에너지	- 패널·풍력터빈·배터리 생산 및 주요 광물 가공 등에 대한 온쇼어링 세액공제(\$300억) - 신규 청정에너지 제조시설에 대한 대출·보조금 지원(\$220억) - 원전 신규건설 설비투자금액 30% 세액공제, 발전 MWh 당 15달러 세액공제 등
	기후변화 대응	- 미국산 전기·대체에너지 차량 구매 시 세액공제 - 가정용 열펌프·태양광·전기HVAC 등에 대한 소비자 세액공제 - 지역사회 청정기술 지원(\$270억) 등
	헬스케어	- ACA 보험료 보조금의 수혜대상 및 지원규모를 2025년까지 연장 - 메디케어 환자 처방약 본인부담액을 연간 \$2,000로 상한 등
	가뭄대응	- 아리조나 지역 등 가뭄대응 지원
재원 확보	최저한세율 적용	- 3년 연평균 순이익 \$10억 이상 기업에 대해 최소 15% 법인세 부과
	처방약 가격개혁	- 메디케어 처방약 가격협상 허용 - 메디케어 의약품 가격 인상에 대한 물가연동제 도입
	국세청 과세 강화	- 세무집행(tax enforcement) 강화, 납세서비스 개선, 시스템 현대화 등
	자사주매입 과세	- 자사주매입(buyback) 시 매입액의 1%를 소비세로 부과

자료: 국제금융센터

2. 국내 자동차 업계에 미치는 영향

○ 역내 의무생산 및 주요 광물·부품 조달비율 조건 등으로 국내 업체의 현지 시장경쟁력 약화 불가피

- 완성차: 한국산 전기차는 현재 미국시장에 전량 국내수출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미포함
 - 한국의 전기차 대미 수출량은 2021년 3만 대에서 2022년 10만 대 수준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, IRA 발효로 내년부터 시장점유율 하락 가능성
 - 한국의 전기차 대미 수출 추이(백만 달러): ('19) 602 → ('21) 1,137 → ('22.1~8월) 2,379
- 배터리·소재: 전기차 배터리 등에 사용되는 핵심광물의 공급망에 대한 중국 의존도가 높아 현 시점에서 역내 의무조달 비율 충족이 어려운 실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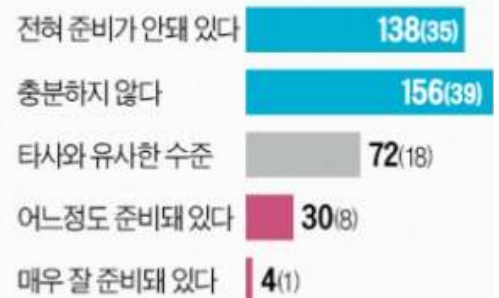
[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 중 전기차 관련 세액공제 내용]

개요	주요 광물·배터리 부품의 일정 비율 이상을 북미 또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·가공·생산한 전기차에 대해 1대당 최대 7,500달러 세액공제
생산조건	북미에서 생산된 차량 한정
지급대상	니켈·리튬 등 배터리 광물(3,750달러), 양극재·음극재 등 배터리 부품(3,750달러)
소득기준	연간 총수입 30만달러 미만 가구
가격기준	SUV·픽업트럭: 8만달러 이하, 승용차: 5.5만달러 이하

○ 미국 현지 생산비중 확대 시 미래차 경쟁력이 부족한 중소·중견 부품업체의 도산 발생 우려

- * 현대·기아차 핵심 글로벌 협력사 중 20% 가량이 미래차 전환에 적응하지 못 해 2030년까지 문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 (EY한영)
- 국내 부품사의 미래차 역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경쟁력 확보까지 상당한 시간 필요
 - 고도의 기술이 들어가는 전장부품 등의 개발을 위해서는 상당기간 연구개발투자가 필수적
 - 개발 후 수익이 나기까지도 최소 3~5년 시간 소요
- 급격한 국내 생산투자 위축 시 재무적 여력이 부족한 중소·중견업체의 사업재편 어려움 가중
 - 부품사 경영난이 심화되고, 이로 인해 미래차 대비를 위한 투자가 다시 줄어드는 악순환 발생
- 국내 대기업의 미국투자 확대에 따른 우량 협력업체들의 동반진출이 가속화될 경우 국내 제조업 공동화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

400개 부품사 대상 미래차 준비현황 조사
(단위:개, %)



※회사수. ()은비중

자료: EY한영

3. 대응 방안

○ IRA 시행령 마련 시 FTA 체결국에 대한 법 적용 예외 또는 유예를 강력히 요청

- WTO를 활용하는 방안은 다자체제 내에서 문제를 공론화한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의미가 있으나, 실질적 분쟁해결수단이 되기에 일정한 한계점 존재
 - 분쟁 해결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물론, 현재 사법절차의 중요한 한 축인 상소기구가 작동하고 있지 않아 구속력 있는 분쟁해결기구의 판정과 패소국의 이행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실정
- 한미 FTA 상 한국산 제품에 대해 내국민 대우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음을 강조하며, 국내 수출 전기차에 대해서도 동등한 세제혜택이 제공되어야함을 설득
 - 한-미 FTA 제2조 2항 내국민 대우: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3조 및 그 주해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제품에 대하여 내국민 대우를 부여한다.
 - 현재 미국의 FTA 체결국은 주로 남미 국가 중심으로 20개국 정도로 많지 않음
- 원칙적으로 IRA 적용대상에 대한 예외규정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나, 현실적인 측면에서 2~3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것도 대안적 방안으로 활용 가능
- 글로벌 주요 업체들 중 내년부터 IRA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기업은 사실상 없다는 점을 충분히 전달하면서 충족비율 조정 등을 적극 요구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
- 추가적으로 IRA 관련 민·관·정 등이 참여하는 TF 마련을 통해 일원화된 대응체계 구축

○ (가칭) 미래차 특별법 제정, 신속하고 체계적인 미래차 생태계로의 전환 지원

- 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 거대·종합지원센터 구축
 - * 현재 한국의 전기차 부품 국산화율은 68%, 미래차 기술 수준은 선진국 대비 78.8% 수준
 - 신속한 연구개발 및 제품생산을 위한 집적효과 극대화
 - 핵심 연구개발 장비 구축, 인력 교육, 소프트웨어 개발, 테스트베드 제공 등 통합기능 수행
 - 독자적 시설을 구축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전담, 내연기관에서 미래차 부품기업으로 신속한 사업전환 유도
- 상생형 연구개발 지원 확대
 - △대-중소기업 간, △異업종 기업 간, △공급-수요기업 간 상생형 연구개발 등에 집중투자
 - 국내보유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신속한 상용화 추진 및
 - 세계시장에 도전할 수 있는 핵심기술의 고도화 유도
- 산·학·연 활성화를 통한 연구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 지원
 - * 국내 부품 기업들의 미래차 기술개발 중 가장 큰 애로 사항은 미래차 분야 전문 인력 부족¹⁾
 - 중소기업과 연계된 특화 교육프로그램 신설, 대기업과 공동교육 추진
 - 연구개발 인력 채용에 대한 세제혜택 강화

1) 「자동차산업 미래차 전환준비 및 생산 경쟁력실태조사」 한국자동차산업협회(2021)

○ 내수시장 확대를 위한 전기차 보조금 제도 개선

- 구매보조금은 전기차 수요 증가 및 차량가격 인하에 중요한 역할 수행²⁾
 - 2016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300만 원 인하(1,500만 원→1,200만 원)로 수요가 급감하여 7월부터 구매보조금 200만 원 재인상(1,200만 원→1,400만 원)
 - 신차 시장에서 전기차가 0.5%를 차지하는데 걸린 시간: 전기차 보조금 시행국가(노르웨이, 네덜란드, 프랑스, 영국) 12~18개월, 전기차 보조금 미시행 국가(독일) 3년 이상
- 정부가 목표로 하는 전기차가 일정수준 보급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구매보조금 축소 계획을 일정기간 유예할 필요가 있음
 - 정부는 친환경차 개발 보급 중장기 기본계획을 통해 2025년까지 전기차 113만 대, 30년까지 300만 대 누적보급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, 구매보조금 단가를 계속해서 하향 조정
 - 전기차 원가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배터리가격이 최근 소재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가격경쟁력 제고에 걸림돌로 작용
- 특히, 미국이 전기차 시장 확대를 위해 구매보조금을 2032년까지 10년간 지원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나라 또한 구매보조금 지원 확대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로드맵 마련 필요
 - 정부는 2025년 이후 전기차 구매보조금에 대해 국제동향과 가격 경쟁력 확보, 보급 추이 등을 고려하여 지속여부를 검토하는 계획 수립

[전기차 구매 보조금 추이(만 원)]

연도	2017	2018	2019	2020	2021	2022
구매보조금	1,400	최대 1,200	최대 900	최대 820	최대 800	최대 700

자료: 손동희 · 김태은(2022), 친환경자동차 지원사업 분석, 국회예산정책처 자료 재인용

○ 중소·중견기업을 중심으로 한 초소형 전기차 생태계 조성 지원

- 중소 부품업체들이 전기차 시장에서 빠르게 경쟁력을 갖추 수 있도록 기술개발 적용이 용이하고 빠른 상용화가 가능한 초소용 전기차 생태계 조성 지원
 - 초소형 전기차는 10kwh 용량의 작은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기차로 기존 승용차(4인승 이상)보다는 작고 이륜차(1인승)보다는 큰 사이즈의 전기차로, 10~30(km) 범위의 근거리 이동에 최적화된 이동수단으로 주로 배달 등 단거리, 도심 출퇴근, 농촌 등 도서 지역 등에서 활용가능
- 이와 관련하여 전라남도의 경우 다양한 형태의 초소형 전기차에 대한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바 중소·중견기업을 중심으로 한 초소형 전기차 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 등 적극적인 지원 필요

2) 손동희 · 김태은(2022), 친환경자동차 지원사업 분석, 국회예산정책처